

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

의결안건(제22-1호)



---

#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(안)

## [요약본]

---

2015. 11. 10

관계부처 합동

- ◇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구촌 공동 번영을 위해 세계 각국과 UN·OECD 등을 중심으로 공동노력이 경주되어옴(UN 새천년개발목표(MDGs) 발표, '01.6월)
- ◇ 우리나라는 '10년 OECD DAC에 가입함으로써 공식적인 원조공여국이 되었고,
  - ODA 규모를 지속 증가시키면서 UN이 정한 MDGs (사회개발 중심 8대 목표) 이행을 목표로 국내 ODA 정책 수립·이행
    - 국제개발협력 1차 기본계획('11~'15) 수립·이행
    -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Governance 구축
    - ODA 사업 조정 및 효과성 제고
- ◇ MDGs를 승계하는 국제 사회의 새로운 목표로 SDGs (사회개발 외 경제발전·환경보존이 추가된 17대 목표)가 제시되면서 우리나라의 ODA 정책도 SDGs를 수용하여 정합성 제고 필요
- ◇ 그간 마련된 제도적 기반 하에 2차 기본계획 기간('16~'20)에는 SDGs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전략 마련

< 1차 계획 >

< 2차 계획 >

- ◆ 유·무상 통합추진기반 구축 ⇒ 유·무상간 통합전략 강화
- ◆ Bottom up 방식 사후적 조정 ⇒ Top down 방식 전략적 계획 수립
- ◆ ODA 규모의 지속적 증가 ⇒ ODA 사업의 질적 제고
- ◆ ODA 평가시스템 도입 ⇒ ODA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강화
- ◆ 시민단체·기업·학계 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 ⇒ 참여를 통한 시너지 창출
- ◆ 일반국민의 ODA 인식 제고 ⇒ 세계시민으로서 ODA에 능동적 참여

# 목 차

I.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환경 .....	1
II. 제1차 기본계획 추진결과 평가 .....	2
III.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.....	3
IV. 국제개발협력 주요 추진과제 .....	5
<b>1</b> 통합적인 ODA .....	5
<b>2</b> 내실있는 ODA .....	6
<b>3</b> 함께하는 ODA .....	7
V. 향후 계획 .....	8

# I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환경

## 1. 국제환경 분석

- '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\* (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) 공식 채택
  - 사회개발·경제개발·환경 분야 포괄, 개발의 차원 확대
    - \*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(SDGs) 및 169개 세부목표(targets) 제시
- 개도국 내 대규모 사업 증가 및 기후변화·에너지 고갈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재원 수요 증가 추세
  - 부족한 개발재원 확보를 위해 ODA의 전략적 활용, 민간 부문의 역할 강조

## 2. 국내환경 분석

-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다변화
  - ODA사업 참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수가 증가('10년 36개→'14년 45개) 하였으며, 민간 부문이 주요한 참여자로 부각
- 재정 상황 악화·타 분야 재정 수요 증가로 ODA 재원 확대 제약
  -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재정상황 개선 한계
  - 국가채무가 증가되는 가운데, 취약계층·청년고용 지원 등 국내 복지재정 수요 지속 확대
- ODA 효과성·투명성 제고 요구 강화
  - ODA에 대한 높은 관심 및 국내재정의 압박에 따라 ODA의 효과성·투명성 강화 요구 증가
    - \* 대외원조정책 해결과제 중 '원조정책의 투명성 부족'이 최우선 과제로 인식 (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, '14.12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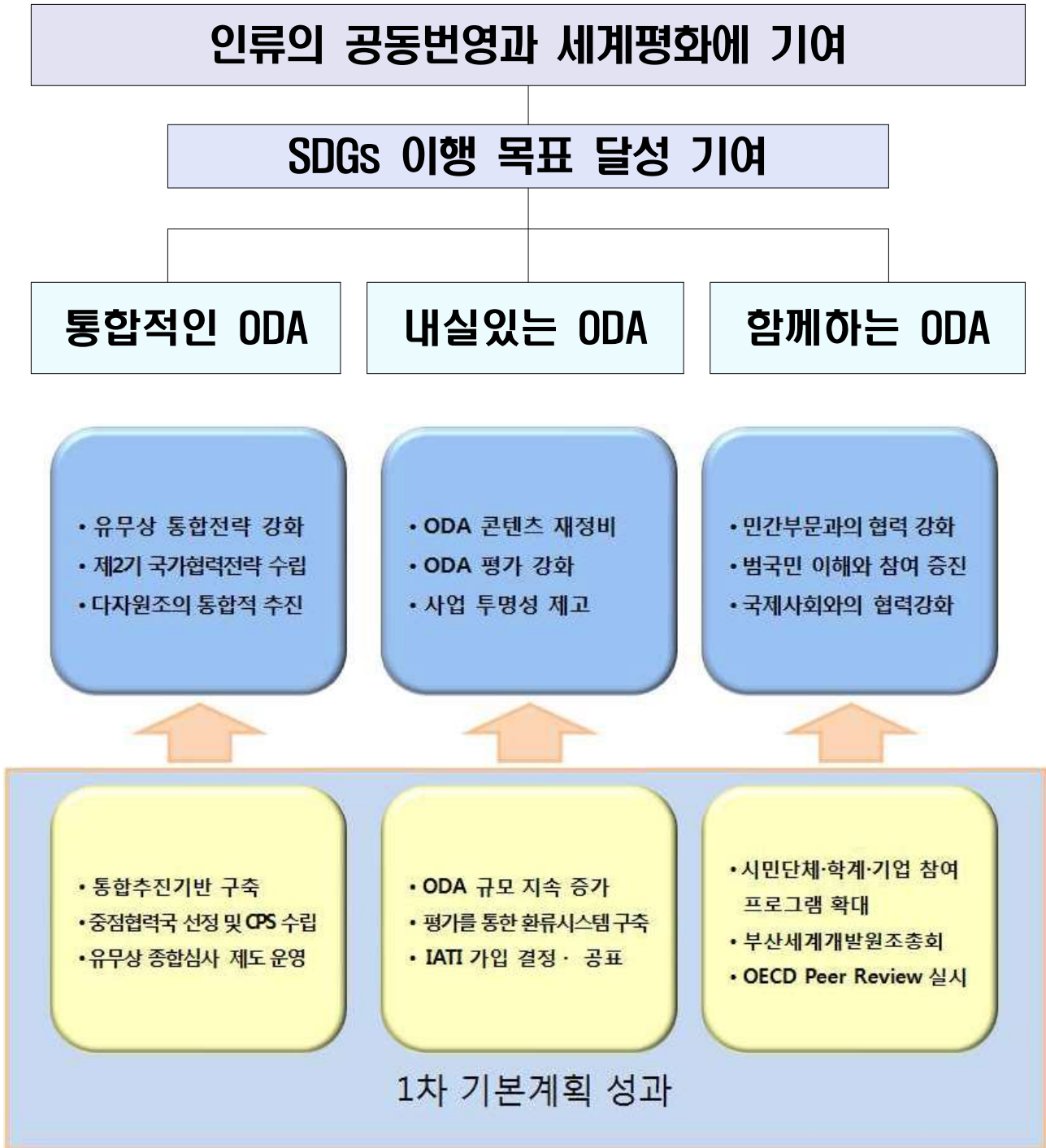
## 1. 총론

- ODA 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신흥공여국으로 자리매김
- 다만, 원조효과성 제고, 사업간 조정·연계, 민간 부문 등과의 협력 강화 등이 향후 중점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상존

## 2. 기본 틀에 대한 평가

- (ODA 규모) ODA/GNI는 '14년 0.13%(잠정)로 목표(0.25%) 미달성
  - 총 ODA규모는 '10년 11.7억 달러에서 '14년 18.5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여 DAC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연평균 증가율 기록(12%)
    - \* '10~'14년 연평균 증가율(%) : 美 1.9, 日 -4.5, 英 10.4, DAC 평균 1.2
- (유·무상 비율) '14년 기준으로 유상·무상 비율(순지출)은 37:63(잠정)로 목표 비율(40:60)을 대체로 유지
- (양·다자 비율) '14년 기준으로 양자:다자 비율은 예산 기준으로 68:32, 순지출 기준으로 75:25로 목표 비율(70:30)을 대체로 유지
- (비구속성 비율) '14년 현재 ODA 비구속성 비율은 62%로 목표(75%)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, 비구속성 비율은 지속 증가 추세
  - \* 비구속성 비율(%) : ('11)52 → ('12)55 → ('13)61 → ('14)62
- (지역별 배분) '14년 현재 아시아 중점지원, 아프리카 협력 확대 기조 유지
  - \* 아시아 45.1%, 아프리카 23.9%, 중남미 7.8%, 중동·CIS 7.9%, 오세아니아 및 기타 1.0%, 지역미배분 14.2%

1.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기본방향



## 2. 제2차 국제개발협력 방향

- (재원규모 확대) '20년까지 GNI 대비 0.20% 달성(순지출, 인정액 기준)
  - 2030지속가능개발의제가 종료되는 '30년까지 0.30%(DAC 회원국 현 평균 수준) 목표로 추진

< ODA/GNI 비율 >

구 분	2016	2017	2018	2019	2020
ODA/GNI(%)	0.15	0.16	0.17	0.18	0.20

- (유·무상 비율) '17년까지 현행 비율 40:60 유지(순지출 기준)
  - \* ODA 계상방식 변경(순지출→인정액), 민간재원 활용방안 도입 등을 고려, '17년 상반기 '18~'20년 비율 재설정
- (양·다자 비율) 75:25(순지출, 인정액 기준) 수준으로 유지
- (비구속성 비율) '20년까지 유상 55%, 무상 95% 수준으로 확대

## 3. 국제개발협력 자원 운용계획

- (지역별) 아시아 중심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아프리카 비중 점진적 확대
- (소득그룹별) 현행과 비슷한 배분을 유지하되, 최빈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 위주의 원조 지원
- (분야별) 경제인프라,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등 SDGs의 방향에 부합하게 배분
  - \* 개도국 소녀 보건·교육 분야, 농촌개발 분야도 중점 지원
- (형태별) 프로젝트 외에도 NGO·PPP 지원, 프로그램 원조(PBA) 분야 등 지원 형태 다변화

## IV

# 국제개발협력 주요 추진과제

## 1 통합적인 ODA

### □ 유상·무상 통합 전략 강화

- 기본계획·시행계획 수립지침에 기반하여 시행기관은 매년 기관의 ODA 추진방향 및 개별 사업계획을 포괄한 시행계획 수립
  - \* 기존 시행계획의 경우 사업위주로 작성되어 ODA 전략·방향성 제시 미흡
- 유상·무상원조의 전략적 협업을 위한 협의체 구성·정례화
  - \* 국장급 협의체(국조실·기재부·외교부) 분기별 개최 및 5자 협의체(국조실·기재부·외교부·EDCF·KOICA)구성·운영 등

### □ 무상 통합 전략 강화

-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(외교부)를 수시 개최하여 사업의 조정·심의 및 연계사업 발굴 활성화
- 부처의 분야별 전문성과 KOICA의 원조 집행전문성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KOICA의 플랫폼\* 기능 강화
  - \* 정부부처제안사업 및 공공협력사업 등 확대

### □ 2기 국가협력전략(CPS) 수립

- 공관 및 수원국 의견수렴, 우리나라의 산업별 경쟁력 분석 등 정량·정성적 분석을 병행하여 국가별 중점협력분야 선정
  - \* 제2기 중점협력국(24개국) 대상 産·官·學·研 작업반 구성·운영

### □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

- 중점협력기구 선정 등 다자원조 전략\*을 수립하고 분담금 납부체계 개선 등 다자협력의 효율성 도모
  - \* 중점협력 다자기구를 선정하고 동 기구들에 예산배분 집중

### □ ODA 콘텐츠 재정비

- 기존 개발협력 모델\*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통해 모델 재정비 추진, 성공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

\* (한국형 ODA 모델) 4개 분야 159개 프로그램

- 재정비 모델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발굴시 우선 고려, CPS와 연계 등을 통해 이행력 담보

### □ 종료 ODA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

- 시행기관별 사후관리지침 마련, 종료사업 현황조사 실시 (종료 5년 후) 등 종합적인 사후관리체계 구축

### □ ODA 평가와 환류 강화

- 대규모 사업에 대한 외부평가 의무화\*, 독립적인 평가 부서 설치 등 평가·환류 강화를 통한 사업효과성 제고 도모

\* 10개 이상 ODA 사업 추진 시행기관의 경우 사업비 상위 5개 사업 중 3개 이상 외부평가 실시

### □ 사업투명성 제고

- 국제원조투명성기구(IATI) 공개대상·항목 확대 등 투명성 제고 노력 지속

\* 'ODA KOREA 홈페이지'를 통해 IATI 정보공개 항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성 확대

### □ 인도적 지원 확대

- 중장기적으로 인도적 지원 규모 지속 확대, 정부-민간간 협력채널 구축 강화 등

### □ 범국민 이해와 참여 증진

- 사회·전문교과 과정에 ODA 내용 반영 등 세계시민교육 강화
- 연령별 ODA 참여 기회 확대\*로 ODA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 확보 기반 마련

\* (초중고) 체험행사, (대학생) WFK·EDCF 청년인턴, (청·장년) 자문단 참여 확대

### □ 민간 파트너십 다원화 및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확산

- 시민단체·학계·기업 대상 민관협력 프로그램의 규모 확대, 재계 CSR·CSV 사업과 ODA 사업간 연계 강화 등

### □ 삼각협력 활성화

- 우리와 지리적·문화적 거리감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거점 국가\*를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으로 개발협력 지평 확대

\* 예) 아시아 : 베트남, 필리핀 / 중남미 : 브라질, 콜롬비아, 페루, 칠레 등

### □ 다양한 민간재원 활용 확대

- 국내재정의 한계 및 개도국의 개발수요 확대 등을 고려하여 개발금융\* 등을 통해 개발협력 재원 규모 확충

\* (예)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수원국에 다양한 형태의 양허성 차관 제공, 이차를 정부가 보전

### □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

- 주요 공여국 원조기관들과 상시협의채널을 확대하고, 주요 국부펀드와의 협력을 통해 모범 중견공여국 역할 수행

시행계획 수립·추진

- 각 부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
- 유상(기재부), 무상(외교부) 분야별 시행계획(1년단위) 수립

 「제2차 기본계획」 본격 추진

- '16년부터 제2차 ODA 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추진과정에서 조정 필요사항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율

 「제2차 기본계획」 평가 및 점검

- '17년 OECD DAC 동료검토(Peer Review) 결과를 참조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
- 국내외 환경 변화 및 주요 정책 환경 변화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관련사항 점검·조정 실시

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

의결안건(제22-1호)



---

#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(안)

---

2015. 11. 10

관계부처 합동



- ◇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구촌 공동 번영을 위해 세계 각국과 UN·OECD 등을 중심으로 공동노력이 경주되어옴(UN 새천년개발목표(MDGs) 발표, '01.6월)
- ◇ 우리나라는 '10년 OECD DAC에 가입함으로써 공식적인 원조공여국이 되었고,
  - ODA 규모를 지속 증가시키면서 UN이 정한 MDGs (사회개발 중심 8대 목표) 이행을 목표로 국내 ODA 정책 수립·이행
    - 국제개발협력 1차 기본계획('11~'15) 수립·이행
    -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Governance 구축
    - ODA 사업 조정 및 효과성 제고
- ◇ MDGs를 승계하는 국제 사회의 새로운 목표로 SDGs (사회개발 외 경제발전·환경보존이 추가된 17대 목표)가 제시되면서 우리나라의 ODA 정책도 SDGs를 수용하여 정합성 제고 필요
- ◇ 그간 마련된 제도적 기반 하에 2차 기본계획 기간('16~'20)에는 SDGs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전략 마련

**< 1차 계획 >**

**< 2차 계획 >**

- ◆ 유·무상 통합추진기반 구축 ⇒ 유·무상간 통합전략 강화
- ◆ Bottom up 방식 사후적 조정 ⇒ Top down 방식 전략적 계획 수립
- ◆ ODA 규모의 지속적 증가 ⇒ ODA 사업의 질적 제고
- ◆ ODA 평가시스템 도입 ⇒ ODA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강화
- ◆ 시민단체·기업·학계 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 ⇒ 참여를 통한 시너지 창출
- ◆ 일반국민의 ODA 인식 제고 ⇒ 세계시민으로서 ODA에 능동적 참여

# 순서

I. 추진 배경 .....	13
II.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환경 .....	15
<b>1</b> 국제환경 분석 .....	16
<b>2</b> 국내환경 분석 .....	19
III. 제1차 기본계획 추진결과 평가 .....	22
<b>1</b> 총론 .....	23
<b>2</b> 기본 틀에 대한 평가 .....	24
<b>3</b> 성과 .....	28
<b>4</b> 한계 .....	31

# 순 서

## IV.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..... 34

1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기본방향 ..... 35

2 제2차 기본계획의 원칙 ..... 37

3 제2차 국제개발협력 방향 ..... 39

4 제2차 국제개발협력 자원 운용계획 ..... 41

## V. 국제개발협력 주요 추진과제 ..... 42

1 통합적인 ODA ..... 43

2 내실있는 ODA ..... 55

3 함께하는 ODA ..... 64

## VI. 향후 계획 ..... 71

---

# I. 추진 배경

---

-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에 따라 위원회는 5년마다 중기 ODA 전략인 「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」 수립
  - 「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(‘11~’15)」이 완료되고 국내외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적용할 「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(‘16~’20)」 마련

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개요

- (법적근거)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8조
- (수립주체) 국제개발협력위원회(주관기관 협조)
- (주요내용)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, 규모 및 운용계획, 중점협력대상국 중기지원전략, 국제개발협력 투명성 증진계획 등
- (수립절차)

순서	내 용	주 체
1	분야별 기본계획안 작성 지침 마련	국제개발협력위원회 (국무조정실)
2	분야별 기본계획안 제출	주관기관 (기재부·외교부)
3	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 종합 작성	국제개발협력위원회 (국무조정실)
4	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(안) 심의·조정	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
5	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확정	국제개발협력위원회
6	기본계획 시달(시행기관/재외공관 등)	총리실, 주관기관

- 향후 5년간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의 기본방향 구체화
  - 그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, ODA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고 전략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2차 기본계획 수립

---

## Ⅱ.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환경

---

**1** 국제환경 분석

**2** 국내환경 분석

## 1. 2030 지속가능개발 체제 출범

- UN은 새천년개발목표(MDGs, 2001-2015) 이후 '16-'30년간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할 개발목표 마련
  - '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(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) 공식 채택
    - \* 2030 개발의제의 핵심으로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(SDGs) 및 169개 세부목표(targets) 제시
- MDGs는 절대빈곤퇴치, 교육, 보건, 양성평등 등 사회개발 위주의 의제, SDGs는 사회개발, 경제개발, 환경 등으로 개발의 차원 확대
  - 개발협력의 범위와 유형이 더욱 확대되고 다양화 될 것으로 전망
    - \* (MDGs) 8개 목표, 21개 세부목표 ⇒ (SDGs) 17개 목표, 169개 세부목표

### < 2030 지속가능개발 프레임워크 >



## 2. 개발 자원 범위 다각화

- 개도국 내 대규모 사업 증가 및 기후변화·에너지 고갈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자원 수요 증가\* 추세
  - \* 글로벌 인프라 개발수요는 '13년 연간 4.2조 달러에서 '25년 9조 달러로 증가 예측(PwC(2014), "Capital Project and Infrastructure Spending Outlook to 2025")
- 부족한 개발자원 확보를 위해 ODA의 전략적 활용, 민간 부문의 역할 강조
  - 제3차 유엔개발자원총회(에티오피아, '15년)에서 ODA 자원 조성 노력과 함께 여타 재원을 촉매하는 ODA 기능 강조
  - 공여국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부문 자원 등 새로운 자원 조달 및 활용 수단 발굴
    - \* 정부 재정 뿐만 아니라 시장차입 재원을 함께 활용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식 포괄(시장성 차관, 보증지원, 지분 투자 등)
- 개발자원 측정 방식의 개선으로 개발재원의 공급·활용의 책무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강화
  - 총공적개발지원(TOSSD)\* 등 ODA 외 개발과 연관되는 폭넓은 공적자원 측정 시도 논의 활발
    - \*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
  - '18년부터 순지출(Grant Element)에서 증여등가액(Grant Equivalent) 방식으로 ODA 측정방식 변경

### < ODA 통계 측정방식의 변화 >



\* EDCF 이슈페이퍼 (2015)



### 3. 개발효과성 및 파트너십 강조

- 원조의 효율적 전달체계를 중시하는 '원조효과성'에서 개도국의 성장과 빈곤감소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'개발효과성'으로 논의의 패러다임 변화
  - 전통적인 양자원조 중심에서 개도국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안\* 모색
    - \* 삼각협력·남남협력 적극 활용, 상호 지식과 경험 공유 확대 등
  - 효과성과 직결되는 수원국의 주인의식 및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다양한 개발재원(FDI, 해외송금, 민간자금 등)에 대한 활용 강조
- 개도국 개발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공적원조와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용적 개발 파트너십 구축 강조
  - 개발협력 전반에 민간부문 참여 확대, 무역을 위한 원조 증진 등으로 개발협력의 참여자 확대
- 국제경제의 장기 침체 및 서구 공여국의 ODA 증액 여력 한계에 따라 공여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책무성 강화 요구 증대
  - 공여국·수원국간 상호 보완성과 차별성을 인정하면서 공통의 원칙과 목표를 바탕으로 파트너십 설정
  -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로서 개도국의 주인의식(ownership) 강조

## 1. 국제개발협력 참여 다변화

□ (공공부문) ODA 규모 · 인식확대로 ODA사업 참여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수는 1차 기본계획 기간동안 36개('10년)에서 45개('14년)로 증가

○ 특히, 동 기간중 4개 지자체가 신규로 참여하였으며, 지자체 ODA 규모 또한 급격한 증가 추세\*

\* ('10년) 38.01억원 → ('14년) 149.89억원

□ (민간부문) 민간의 참여를 장려하는 국제 사회의 분위기와 민간 부문의 자각에 영향을 받아 민간부문이 주요한 참여자로 부각

○ 'NGO에 의한 무상원조(Net Private Grants)'는 지속 증가 추세

(단위 : 백만불)

년도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
금액	155.9	49.17	174.81	30.15	331.1	387.8

\* OECD 통계

○ 기업은 국제사회 공헌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(CSR) 준수 및 공유가치창출(CSV)과 더불어 잠재적 시장인 개도국 진출 방법으로 개발협력 활용

## 2. ODA 자원 확대 제약

□ 1차 기본계획 기간 중 GDP 성장률은 3% 내외

\* GDP성장률(%) : ('11) 3.7 → ('12) 2.3 → ('13) 2.9 → ('14) 3.3

○ 2차 기본계획이 실행되는 향후 5년간의 GDP 성장률도 5% 내외로 전망되어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될 확률은 낮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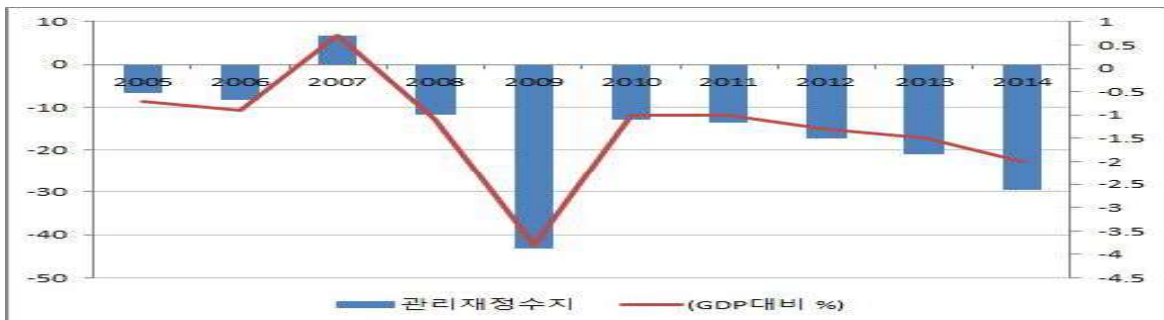
□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재정상황 개선 한계

○ 위기 이전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\*는 균형 혹은 소폭의 적자 (GDP대비 1% 미만)를 기록했지만, '08년 이후에는 GDP 대비 1% 이상의 적자 기록 중

\* 관리재정수지 = 통합재정수지 -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

\* 사회보장성 기금 : 국민연금, 사학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

< 우리나라 관리재정 수지 현황 >



\* 기획재정부 재정통계

○ 국가채무가 증가되는 가운데, 취약계층·청년고용 지원 등 국내 복지재정 수요 지속 확대

□ 재정 상황 악화와 타 분야 재정 수요 증가는 ODA 예산 확대에 애로요인으로 작용

### 3. ODA 효과성·투명성 제고 요구 강화

□ 개발협력에 대한 국내외적 인지도 상승에도 불구하고, ODA 증액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정체 상태

○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ODA 제공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86.5%(적극 찬성은 9.7%)

\*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, 경희대 산학협력단('14.12월)

○ 다만, ODA 규모 확대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소극적이며,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

\* '14년 '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' 결과 현재의 ODA 규모에 대해서는 걱정 54.3%, 축소32.7%, 확대 13.0% 의견으로 나타남

\* 축소지지 비율 : ('11) 26.7% ('12) 27.4% ('13) 22.4% ('14) 32.7%

□ ODA에 대한 높은 관심 및 국내재정의 압박에 따라 ODA의 효과성·투명성 강화 요구 증가

○ 대외원조정책 해결과제 중 '원조정책의 투명성 부족'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

\*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, 경희대 산학협력단('14.12월)

---

## Ⅲ. 제1차 기본계획 추진결과 평가

---

1 총 론

2 기본 틀에 대한 평가

3 성 과

4 한 계

# 1 총론

- ODA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ODA/GNI 비율을 증가시켜, 국제사회에서 신흥공여국으로 자리매김
  - ODA/GNI비율('14년 기준)은 0.13%(잠정)로 목표치('15년 0.25%)에 미달하였으나 최근 5년간 ODA 총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12%로 DAC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
    - \* '10~'14년 연평균 증가율(%) : 美 1.9, 日 -4.5, 英 10.4, DAC 평균 1.2
  - 유·무상 비율, 양자·다자비율 등은 당초 목표 달성
- 국제사회에서도 짧은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수원국에서 주요 공여국으로 전환한데 대해 높이 평가
  - 타 공여국과는 차별되는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에 기초한 ODA 추진을 비교우위로 평가
    - \* OECD DAC Peer Review 2012 - KOREA
- 이러한 성과 및 국제사회 평가에도 불구하고 원조효과성 제고, 사업간 조정·연계, 민간 부문 등과의 협력 강화 등이 향후 중점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상존

## 2 기본 틀에 대한 평가

### 1. ODA 규모

- 「ODA 선진화방안(‘10)」에서 ‘15년까지 ODA/GNI 0.25% 달성 목표 제시
- ODA/GNI는 ‘14년 0.13%(잠정)로 목표 미달성
  - 총 ODA규모는 ‘10년 11.7억 달러에서 ‘14년 18.5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여 DAC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연평균 증가율 기록(12%)

< 우리나라 ODA 규모 추이 (2010-2014년) >

(순지출, 백만불)

구 분	2010	2011	2012	2013	2014(잠정)
ODA/GNI 목표치	-	0.13	0.15	0.18	0.21
ODA/GNI 실적	0.12	0.12	0.14	0.13	0.13
ODA 규모	1,173.8	1,324.6	1,597.5	1,755.4	1,850.7
양자간	900.6	989.6	1,183.2	1,309.6	1,391.4
- 유상	326.7	414.6	468.3	500.6	512.0
- 무상 (* KOICA)	573.9 (448.9)	575.0 (404.9)	714.9 (444.5)	809.0 (477.4)	879.4 (551.2)
다자간	273.2	335.0	414.3	445.8	459.3

\* ODA주요통계, 수출입은행

## 2. 유·무상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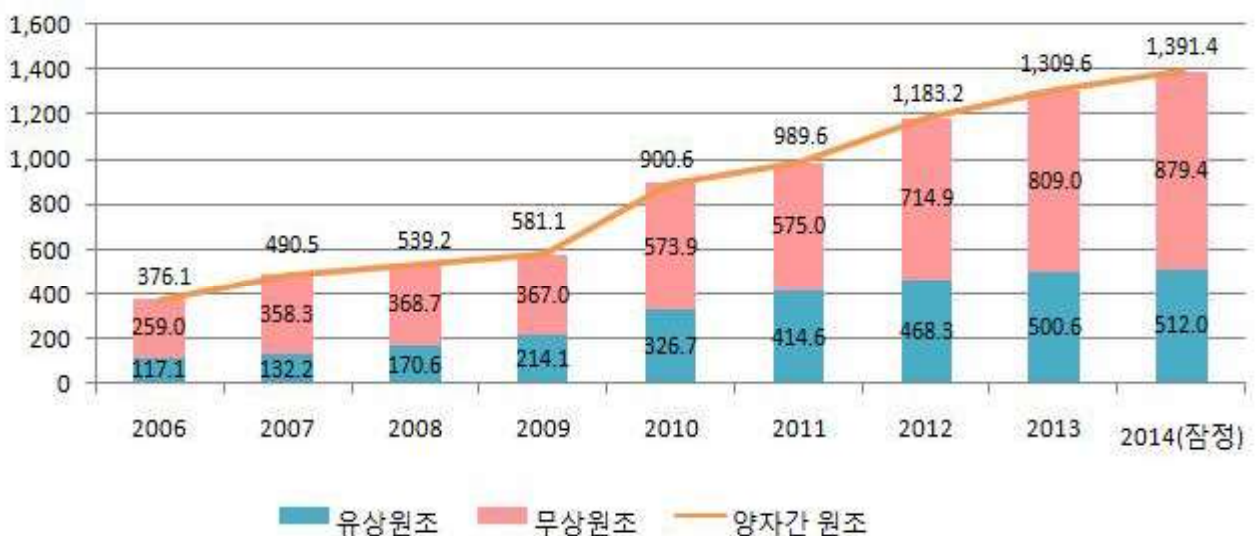
- 「ODA 선진화방안(‘10.10월)」에서 ‘15년까지 유상:무상 비율을 순지출 기준 40:60 내외로 유지 방침
- ‘14년 기준으로 유상·무상 비율(순지출)은 37:63(잠정)로 목표 비율을 대체로 유지
- 시행계획 상 유·무상간 고정비율 유지에도 불구하고, 유상원조의 차관 상환 및 집행지연에 따라 순지출 기준으로는 무상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

### < 유·무상 비율 현황 >

연도	2011	2012	2013	2014	2015
유상:무상(순지출)	42:58	40:60	38:62	37:63(잠정)	미집계

### < 양자간 원조 연도별 추이 >

(순지출, 백만불)





### 3. 양·다자 비율

- 「ODA 선진화방안(’10.10월)」에서 ’15년까지 양자:다자 비율을 70:30 수준으로 유지 방침(예산 기준)
- ’14년 기준으로 양자:다자 비율은 예산 기준으로 68:32, 순지출 기준으로 75:25로 목표 비율을 대체로 유지
- ’14년 기준 다자원조 중 국제금융기구 비율은 69%, UN 및 기타 국제기구 비율은 31%

< 양·다자 비율 현황 >

연도	2011	2012	2013	2014	2015
양자:다자(예산)	70:30	70:30	70:30	68:32	71:29
양자:다자(순지출)	75:25	74:26	75:25	75:25(잠정)	미집계

< 양·다자 원조 연도별 추이 >

(순지출, 백만불)



## 4. 비구속성 비율

- 「ODA 선진화방안(‘10.10월)」에서 ‘15년까지 양자원조의 75% (유상 50%, 무상 100%)를 비구속화 한다는 목표 설정
- ‘14년 현재 ODA 비구속성 비율은 62%로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, 비구속성 비율은 지속 증가 추세

< 비구속성 비율 현황 >

연도	2011	2012	2013	2014	2015
비구속성 비율(%) (유상/무상)	51 (46/68)	55 (47/81)	61 (47/89)	62(잠정) (48/92)	미집계

## 5. 지역별 배분

- 「ODA 선진화방안(‘10.10월)」에서 아시아 중점지원, 아프리카 협력 확대의 지역별 정책기조 마련
  - \* 양자원조 중 아시아 55%내외, 아프리카 20%내외, 중남미 10%내외, 중동·CIS 10% 내외, 오세아니아 및 기타 5% 내외 목표 설정
- ‘14년 현재 지역별로 정책기조와 유사한 비중으로 양자원조 시행
  - \* 아시아 45.1%, 아프리카 23.9%, 중남미 7.8%, 중동·CIS 7.9%, 오세아니아 및 기타 1.0% , 지역미배분 14.2%

## 2 성과

### 1. 원조규모 확대 및 방식 다양화

-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총 ODA 규모는 1.5배 증가
  - 11.7억 달러('10)에서 18.5억('14) 달러로 증가하여 타 공여국에 비해 크게 증가(연평균 12%)
  - 동 기간중 OECD DAC 연평균 ODA 증가율은 1.16%로 우리나라는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율 기록
  -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재정적자 확대 등에도 제약요건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

#### < 연도별 실질증가율 >

	11년	12년	13년	14년
우리나라	5.8%	17.6%	4.8%	0.8%
DAC 회원국 평균	△2.7%	△4.0%	6.1%	△0.5%

- 민간단체, 학계, 기업 등의 참여 기반 마련
  - 개발협력 관련 민관협력사업 분야 예산은 증가 추세\*
    - \* KOICA 민관협력사업 예산 : ('11) 170억원 → ('15) 382억원
  - 기존 시민단체 협력 프로그램 이외에도 기업 협력 프로그램('10)·아카데미 협력 프로그램('12) 도입 등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방식 다양화

## 2. 통합추진 체계 구축

-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유·무상 및 각 부처의 ODA 사업을 조정·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제도적 기틀 마련
- (사업 조정체계 마련) 범부처 ODA 사업계획을 전년도에 검토, 중복·부실사업 조정하여 국개위 최종 의결
  - 사업조정 결과를 토대로 ODA 예산이 편성되도록 제도 개선
    - \* 예산편성지침상 ODA 사업 예산신청시 국개위 사업조정·심사 원칙화
- (기관간 협업 촉진) ODA 규모 및 참여기관 확대에 따라 기관간 유기적 협력 및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·시행
  - \* 국장급 협의체·유무상 주관 및 4자협의체·EDCF-KOICA간 정례협의회·현지협의체 운영, 기관간 인사교류, 합동워크숍 개최 등
- (통합추진전략 마련) 양·다자 및 유·무상 원조를 아우르는 국가별 맞춤형 원조전략(CPS) 수립
  - \* 소득수준, 경제·외교적 관계, 정치적 안정 및 지역안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중점협력국 선정(1차 26개국, 2차 24개국)
- (통합평가 체제 구축) 매년 국조실 주관으로 주요 ODA 과제에 대한 평가 실시(소위평가), 각 기관은 매년 소관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
  - 모든 ODA 시행기관이 자체평가 의무 실시('14년~)
    - \*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'평가소위원회'를 운영하여 ODA 평가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
- (통합홍보 추진) 국조실 주관 통합홍보 T/F를 통해 범정부적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, 범정부 ODA 통합 홈페이지\* 구축('12.1월)
  - \* 지원현황, 위원회 안건, 평가결과 등 공개([www.odakorea.go.kr](http://www.odakorea.go.kr))

### 3. 국제협력 기반 강화

#### □ 부산개발원조총회 개최를 통해 국제규범 형성에 참여

-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 규범 형성과 새로운 개발협력 의제 도출을 위한 고위급포럼(HLF-4) 개최

\* 부산개발원조총회('11.11월) : 160여개국 정부대표, 70여개 국제기구 대표·시민사회·의회·민간분야 대표 등 3,000여명 참석

- 부산총회 주요 공약 및 합의사항 이행 점검을 위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\* 공식 출범 주도('12.6월)

\*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패러다임 전환,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규범 형성

#### □ UN 및 다자차원에서의 개발협력 논의 기여

- ECOSOC 의장국 수임('15.7월)을 통해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 점검 주도

- 다자개발기구 성과를 평가하는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(MOPAN)에 참여하여 아시아 최초로 의장국 수임('16년)

\* MOPAN(Multilateral Organis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)은 '02년 설립, 영국·프랑스·미국 등 17개 회원국이 가입 중이며, 우리나라는 '08년에 가입

- 주요 선진공여국과 매년 정책협의회 개최 실시

\* '14년의 경우 캐나다·호주·EU 등 주요 공여국과 개발협력 정책 협의회 5회 개최

#### □ '12년 OECD DAC 동료검토(peer review) 수검

- DAC가입 이후 최초로 국제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고 국제적 권고 수용을 위한 개선책 마련

## 1. 실질적 통합

- 개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원조효과성 저하
  - 개별부처의 사업 참여 증가에 따른 수원국내 협의채널 혼란 및 사업간 중복 소지 상존
    - \* 무상원조 중 외교부 비율(%) : ('10) 81.5 → ('12) 75.4 → ('14) 728(예산안 기준)
  - 원조 수단(유·무상)의 전략적 선택 없이 사업 범위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어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한계
    - \* 유·무상 시행기관이 동일 국가에 동일 규모(500병상)의 병원을 각각 건립 : 투아티엔훤 병원(EDCF, 3,000만불), 베트남 중부지역 병원(KOICA, 3,500만불)
- 국가협력전략(CPS, Country Partnership Strategy) 실효성 제고 필요
  - 1차 중점협력국(26개)을 선정, CPS를 수립하였으나 백과사전식 기술로 선택과 집종의 목표 미달성
  - CPS가 시행계획 수립과 별개로 운영되는 등 사업 기획단계에서 중점협력국 고려 기제 부족
-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조정 역할 강화 필요
  - 국개위는 ODA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나 기타 협의체를 통해 ODA 정책이 결정되는 사례 발생
  - 국개위의 정책이 다수의 일선 시행기관에 통합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범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ODA 정책 추진(whole of government approach) 한계
    - \*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·교육청 등 다양한 시행기관이 각 기관의 정책 목표에 따라 ODA 사업 추진

## 2. 원조사업 효과성

### □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

- ODA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므로 사업 완공 이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나 성과도출에 한계
  - \* 병원·학교·직업훈련센터 건축 등 시설 중심의 ODA 사업은 인력부족·시스템 구축 지연 등으로 사후관리 미흡 가능성 상존

### □ 사업형성 및 사전타당성 조사 내실화 필요

- 사업의 경제성 및 파급효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만으로는 사업 효과성 담보에 한계
  - \* 영국·덴마크·일본 등은 사전조사 외에도 지역별·분야별 경제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도 함께 실시

### □ 평가·환류를 통한 사업 개선·효과성 제고 미흡

- 자체평가는 의무화 되었으나, 인력·예산의 부족 및 평가부서의 비독립성 등으로 자체평가의 질·객관성은 낮은 실정
- 사업기획 단계에서 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설정 미흡
  - \* ODA 사업 결과물(홍보물 제작, 건물 준공 등)을 성과지표로 제시·평가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(인식제고, 취업률 상승)에 대한 평가 도출에 한계
-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·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평가 결과 활용 미비
  - \* 자체평가 중 환류과제 미도출 평가: ('13년) 39건 중 18건, ('14년) 80건 중 31건

### 3. 집행능력

#### □ 시행기관의 역량 강화 필요

- ODA 규모 확대 및 사업 수 증가에 따른 원조전달 병목현상\*,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원조 집행효율성 저하 우려

\* 사업 증가·규모 확대 및 사업고도화(사전평가·사후관리) 등으로 업무부담 가중

- ODA 규모의 급격한 증대에 비해 시행기관 담당인력은 소폭 증가

\* (EDCF) '91년부터 '14년까지 집행액은 128배 증가하였으나 인원은 5.6배 증가  
집행액 연평균 23.5% 증가, 인원 연평균 7.8% 증가

\* (KOICA) '91년부터 '14년까지 예산액은 35배 증가하였으나 인원은 1.5배 증가  
집행액 연평균 16.7% 증가, 인원 연평균 1.9% 증가

- 원조규모 확대, 원조형태 다양화 등에 따라 수원국과의 상시 협조가 필요하나 현장사무소 인력·역량 부족으로 인해 협조 지연

\* 현지사무소 개수(사업진행국가) : EDCF 13개소(52개), KOICA 48개소(55개)

\* 현지사무소 평균인력 : EDCF 1.6명, KOICA 1.9명

#### □ 민간 분야 전문성 양성 기반 취약

- 개발 컨설턴트 양성, ODA 사업 수행업체의 전문성 강화, 개발컨설팅 산업육성 활성화 필요



---

## IV.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

---

- 1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기본방향
- 2 제2차 기본계획의 원칙
- 3 제2차 국제개발협력 방향
- 4 제2차 국제개발협력 자원 운용계획

##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

## SDGs 이행 목표 달성 기여

## 통합적인 ODA

- 유무상 통합전략 강화
- 제2기 국가협력전략 수립
-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

## 내실있는 ODA

- ODA 콘텐츠 재정비
- ODA 평가 강화
- 사업 투명성 제고

## 함께하는 ODA

-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
- 범국민 이해와 참여 증진
- 국제사회와의 협력강화

- 통합추진기반 구축
- 중점협력국 선정 및 CPS 수립
- 유무상 종합심사 제도 운영

- ODA 규모 지속 증가
- 평가를 통한 환류시스템 구축
- IATI 가입 결정 · 공표

- 시민단체·학계·기업 참여 프로그램 확대
-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
- OECD Peer Review 실시

## 1차 기본계획 성과

## SDGs 이행 목표 달성 기여

□ 향후 15년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\*(17개)인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(SDGs) 채택('15.9월, UN정상회의)

- \* ①빈곤퇴치 ②기아와 농업 ③교육 ④보건 ⑤양성평등  
⑥물과 위생 ⑦에너지 ⑧경제성장 ⑨산업화 ⑩불평등 ⑪지속가능도시  
⑫지속가능소비생산 ⑬기후변화 ⑭해양자원 ⑮생물다양성·생태계  
⑯평화·제도 ⑰이행수단·글로벌파트너십

- (보편성)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적용
- (변혁성) 경제성장·기후변화 등 경제·사회·환경 통합 고려
- (포용성) 취약(여성·아동·장애인)/소외계층 배려(leave no one behind)

□ 우리나라 개발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통해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(SDGs) 달성에 기여

- 우리나라는 개발 과정에서 ODA를 경제·사회 개발의 촉진제로 활용
- 우리나라 개발경험을 기반으로 비교우위 부문 및 국제사회 기여 가능 부문\*의 ODA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구촌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개발에 기여

\* (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) 농촌개발, 교육, 보건, 여성 분야 등

□ 개별 ODA 사업과 SDGs간의 연계 매커니즘 마련을 통해 SDGs와 국내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추진

## 2 제2차 기본계획의 원칙

### 2-1 국제개발협력 통합적 추진

- 1차계획 기간 동안은 ODA 통합 추진의 기반 마련에 주력, 2차계획 기간에는 ODA 추진 시스템의 개선 및 고도화 추진
  -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부실·중복 사업 조정, 통합 중점 협력국 선정 등 ODA 관련 체계·제도 마련
  - 시행기관 증가추세 고려시 정책목표 달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통합추진체계의 고도화 필요
  - ODA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이행력 담보 및 제도적 보완 추진

### 2-2 국제개발협력 내실 제고

- 1차 기본계획은 원조규모의 확대에 초점, 2차 기본계획은 확대된 재원을 효율적·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주력
  -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ODA 규모 연평균 증가율은 OECD DAC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
  - 원조규모 급격한 증가와 함께 부실사업, 사업의 비효율적 수행, 효과 미흡, 사후관리부실 등에 대한 지적 대두
  -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고 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도출

## 2-3 국제개발협력의 참여 확대

- 1차계획 기간 동안 민간 부문의 ODA 관심·참여도는 폭발적으로 증가, 2차계획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보완
  - 1차계획 기간 동안 시민단체·기업 등에서 ODA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가 증대되었으며, 정부는 협력체계 기반 확대 추진
  - 다양한 파트너십 형태를 모색하였으나 시너지 효과 창출 한계
  - 시민단체·기업 등과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 강구 필요
  -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ODA 추진을 위해 범국민 이해와 참여 강화

## 1. 재원규모 확대

- '20년까지 GNI 대비 0.20% 달성(순지출·인정액 기준)
  -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가 종료되는 '30년까지 0.30% (DAC 회원국 현 평균 수준) 목표로 추진
    - \*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는 기존 사회개발 외 경제발전·지속가능 환경 등 개발영역 확대, 개발협력 자원 투입 증가 필요

< ODA/GNI 비율 >

구 분	2016	2017	2018	2019	2020
ODA/GNI(%)	0.15	0.16	0.17	0.18	0.20

## 2. 유·무상 비율

- '17년까지 현행 비율 40:60 유지(순지출 기준)
- 변화되는 상황\*을 고려, 국개위 논의를 거쳐 '17년 상반기 중 '18~'20년 비율 재설정(인정액 기준)
  - \* ODA 계상방식 변경(순지출→인정액), 민간자원 활용방안 도입 등
  - \* DAC 무상비율 : ('11) 98.2% → ('12) 97.2% → ('13) 98.9% (순지출 기준)

< 유·무상 비율 현황 >

연도	2011	2012	2013	2014	2015
유상:무상(시행계획)	50:50	47:53	47:53	49:51	50:50
유상:무상(순지출)	42:58	40:60	38:62	37:63(잠정)	미집계

### 3. 양·다자 비율

- 양자·다자간 비율은 75:25(순지출·인정액 기준) 수준으로 유지
  - 1차 계획 기간 동안 양·다자 비율 관련 이견이 없었던 점, DAC 회원국 평균(약 30%)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
  - \* 현행 다자성 양자(multi-bi) 사업이 시행계획상 다자원조로, 통계작성시 양자원조로 분류되었으나, 2차 기본계획을 기점으로 시행계획에서도 양자로 분류

< 양·다자 비율 현황 >

연도	2011	2012	2013	2014	2015
양자:다자(순지출)	75:25	74:26	75:25	75:25(잠정)	미집계

### 4. 비구속성 비율

- 비구속성 비율은 '20년까지 유상 55%, 무상 95% 수준으로 확대(약정액 기준)
  - 국가·사업·분야별로 비구속성 지원의 단계적 확대 추진
  - \* DAC 비구속성 비율 : ('11) 92.1% → ('12) 86.1% → ('13) 88.2%

< 비구속성 비율 현황 >

연도	2011	2012	2013	2014(잠정)	2015
비구속성 비율(%) (유상/무상)	51 (46/68)	55 (47/81)	61 (47/89)	62 (48/92)	미집계

## □ 지역별 자원 배분방향

- 1차 계획 기간 동안 아프리카 비중은 증가, 아시아 비중은 다소 감소 추세
  - \* 아프리카 : ('11) 18% → ('14) 23.9% / 아시아 : ('11) 63% → ('14) 52.9%
- 2차 계획 기간 동안 기존 추세를 반영하여 아시아 중심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아프리카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
  - 특히, 아프리카의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증가하여 인도주의 성격의 지원 강화

## □ 소득그룹별 자원 배분방향

- 1차 계획 기간 동안 최빈국·저소득국 비중은 증가하고, 상위중소득국 비중 감소
  - \* 저소득국 : ('11) 36.3% → ('14) 39.5% / 상위중소득국 : ('11) 11.5% → ('14) 10.0%
- 2차 계획 기간 동안 현행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되, 최빈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 위주 지원

## □ 분야별 자원 배분방향

- 1차 계획 기간 동안 분야별 배분은 큰 변동없이 유지
  - \* (평균) 사회인프라 45.6%, 경제인프라 27.4%, 생산(산업) 9.1%, 다부문(환경) 5%, 원조국 행정비용 4.9%, 인도적 지원 2.7%, 기타 5.2%
- 2차 계획 기간 동안 경제인프라,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SDGs의 방향에 부합하게 배분
  - \* 개도국 소녀 보건·교육 분야, 농촌개발 분야도 중점 지원 (UN 개발정상회의, '15년)

## □ 형태별 자원 배분방향

- 1차 계획 기간 동안 분야별 배분은 큰 변동없이 유지
  - \* (평균) 프로젝트 65%, 기술원조 15%, NGO·PPP 지원 8.7%, 행정비용 4.9%,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4.6%, 인식증진 1.4% 등
- 프로젝트 외에도 NGO·PPP 지원, 프로그램 원조(PBA) 분야 등 지원 형태 다변화



---

## V. 국제개발협력 주요 추진과제

---

**1** 통합적인 ODA

**2** 내실있는 ODA

**3** 함께하는 ODA

## 1. 유·무상 통합 전략 강화

### 1-1 현황 및 문제점

- 유·무상 종합심사 시스템 정착을 통해 부실·중복 사업의 사전 배제 및 사업발굴절차 개선 등 가시적 성과 도출
  - \* 유·무상 조정 실적 : ('13) 47개→('14)93개→('15)171개→('16)134개
- 시행계획 수립\*이 개별 사업의 타당성 심사에 국한되어, 기본법 및 기본계획에 따른 통합정책 반영 노력은 다소 미흡
  - \* 현행 종합 시행계획은 개별 사업심사(2~6월) →예산편성(6~12월) 이후 확정된 사업을 바탕으로 사후적 수립
- 원조 수단(유·무상)의 전략적 선택 없이 사업 범위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어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한계

### 1-2 개선 방안

- 유·무상 연간종합시행계획 수립 절차 체계화
  - 기본계획의 방향이 개별사업을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조정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절차 체계화

- 사업계획은 '기본계획' 및 '시행계획 수립지침(2.15)\*'에 따라 수립
    - \*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9조 의거(유상 : 기재부, 무상 : 외교부)
    - 시행기관은 각 기관의 ODA 시행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, 차년도 사업계획, 자체평가 계획 등을 포함한 「기관별 시행계획안」 수립(3월말)
  - 주관기관은 기관별 시행계획안 검토 후 「분야별 시행계획안」을 수립하여 국개위에 제출(4월말)
    - 사업검토 결과와 함께 분야별 시행목표·규모 및 자원배분 계획·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정책과제 등을 포함
  - 국개위는 분야별 시행계획(유무상 사업심사 포함) 검토 후, 「연간 종합시행계획」 수립·의결(6월초)
    - 각 시행기관은 국개위의 의결 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년도 예산 요구
- 유·무상 원조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·정례화
- 국조실-기재부-외교부 국장급 협의체를 분기별 1회 정례화 하고 주요 사안 논의
  - 기존 EDCF·KOICA 사업 위주의 4자 협의체를 통합전략협의체 (5자 협의체)로 확대하고 의제 구체화
    - 사업성격에 따른 효과적인 원조 수단 선정, 유·무상의 유연한 활용·연계·공동 정책협의 등 다양한 협업 수단을 활용한 성과 창출 추진
- \* 매년 협업 성과목표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(EDCF·KOICA)

< ODA 협업을 위한 협의체(안) >

	(현 행)		(변 경)
명칭	4자 협의체		통합전략 협의체(안)
구성	기재부(개발협력과), 외교부(개발협력과), 수출입은행, KOICA	⇒	<u>국조실</u> , 기재부(개발협력과, <u>국제개발정책팀</u> ), 외교부(개발협력과, <u>다자지원과</u> ), 수출입은행, KOICA
의제	EDCF-KOICA 연계	⇒	원조수단의 전략적 선택(유·무상, 양· 다자), 양자-다자, 유상-무상 사업 간, 사업단계별 연계 및 공동추진 등 협업방안 논의
주기	연2회	⇒	<u>수시 개최</u>
조정	양부처간 협의	⇒	<u>국조실 총괄</u>

○ ODA 현지협의체 수시 개최를 통해 의사소통의 기회 확대

□ On-line 정보공유·소통 활성화를 통해 협업 상시화

○ ODA KOREA\*에서 주요 사업목록·내용 검색, 사업관련  
의견수렴 등이 가능하도록 기능 재편

\* www.odakorea.go.kr, 국무조정실 관리 한국 ODA 통합포털

## <참고>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 절차

①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	▪ ~2.15, 주관기관 → 각 부처 (기재부 : 유상시행기관/ 외교부 : 무상시행기관)
② 기관별 시행계획안 수립 및 제출	▪ ~3월말, 각 부처 → 주관기관
③ 기관별 시행계획안 협의·조정	▪ 4월, 주관기관
④ 분야별 시행계획안 수립·제출	▪ ~4월말, 주관기관 → 국무조정실
⑤ 분야별 시행계획안 조정·심사	▪ 5월, 국무조정실
⑥ 연간 종합시행계획안 심의·의결	▪ 6월초, 국제개발협력위원회
⑦ 조정결과를 반영한 예산요구서 제출	▪ 6월초, 각 부처 → 기재부
⑧ 예산안 편성 및 심의	▪ 6월~12월, 국회·기재부
⑨ 확정예산을 반영한 차년도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·제출	▪ 12월, 주관기관 → 국무조정실

### ※ 「기관별 시행계획」 주요 내용

- 주관기관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 ‘기관별 시행계획 수립지침’을 각 기관에 시행
  - 차년도 ODA 시행방향
    - 기본계획에 근거한 각 기관의 ODA 시행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, 주요 정책 과제, 사업의 우선순위
  - 차년도 ODA 사업계획
    - 사업개요 : 사업기간, 총사업비 및 차년도 예산안, 대상국가, 사업유형 및 목적, 사업 세부내용, 수원국과의 분담사항 등
    - 정책부합성 : 수원국 수요확인, 재외공관 협의 결과, 중점협력국 및 SDGs 연계성, 우리측 기대효과, 비구속성 여부, 타사업 연계여부, 기관간 협업여부
    - 사업 타당성 : 타당성조사 결과, 유사·중복성 검토결과
    - 성과관리 계획 및 전년도 실적
    - 사후관리 계획
  - 당해년도 자체평가계획

## 2. 무상 통합 전략 강화

### 2-1 현황 및 문제점

-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는 중복·분절화 방지를 위해 ‘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\*’ 주관

\* 외교부 제2차관 주재, 무상원조 추진 관련 사항 및 사업계획 협의·조정

< 무상원조관계기관 협의회 조정내역 >

대상사업 년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
총 사업비 (정부예산배정)	6,896억 (7,894억)	7,511억 (7,536억)	10,452억 (8,408억)	9,578억 (9,223억)
총 사업수	829건	810건	903건	876건
조정 사업수*	49건	27건	138건	108건

\* 조정대상은 ① 중복방지대상 사업 ② 연계강화 필요사업 ③ 효과성 제고 필요사업 ④ 검토불가사업 등으로 구분

- 다만, 다수의 시행기관이 ODA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사업간 중복 및 원조 효율성 저해 우려 상존

- 수원국과의 협의채널 혼란, 유사·중복에 따른 비효율, 사후 관리 부실 등의 부작용 우려

\* 무상원조 시행부처 : ('11) 22개 → ('12) 26개 → ('13) 25개 → ('14) 27개 → ('15) 31개

\* '15년 31개 기관이 859개 무상사업(8,446억원) 추진 중(지자체 미포함)

- 지자체의 ODA 사업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\*이나 지자체 자체예산 사용·독자적 사업 추진으로 조정기제 미흡

\* 전체 ODA 예산 중 지자체 비중(%) : ('10) 0.2 → ('11) 0.48 → ('12) 0.6 → ('13) 0.72 → ('14) 0.68(잠정)

## 2-2 개선 방안

- 중복 배제 및 연계 강화를 통한 무상원조 효과성 제고
  -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(외교부)를 기존 연 1회에서 연중 수시 개최하고 역할 강화
    - 사업의 조정·심의 및 연계사업 발굴 활성화, 시행기관 실무자 대상 사업 추진절차 및 제도 안내 실시(연1회)
  - 유상원조 사업정보 공유 및 연계방안 협의를 활성화하여 무상 시행기관이 효과적인 사업을 기획하도록 유도
- 무상 ODA 플랫폼으로서 전문 원조기관(KOICA) 활용 확대
  - 부처의 분야별 전문성과 KOICA의 원조 집행전문성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KOICA 플랫폼 기능 강화
    - 정부부처제안사업\* 및 공공협력사업\*\* 등 활용 확대
      - \* KOICA가 부처사업 접수·검토, 수원국 요청서 접수·사전타당성조사·시행계획서 작성 등을 통해 사업 수행
      - \*\* 부처가 추천하는 특정 공공기관이 KOICA 사업을 공동사업 형태로 추진
  - 부처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, 필요시 실행 단계 전 KOICA와 협의하여 집행전문성 보완
- 지자체 ODA 사업은 행자부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무상원조 사업과 통합 관리하고 정책 방향 공유

### 3. 중점협력국 및 CPS 내실화

#### 3-1 현황 및 문제점

##### □ 중점협력국 재조정

- '10.10월 제7차 국개위는 「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」을 통해 26개의 유·무상 ODA 통합 중점협력국을 선정\* · 운영
  - \* 중점협력국에 '선택과 집중'을 통해 ODA 예산 집중지원(70% 목표)
- 1기 중점협력국 운용기한이 금년중 만료되며, OECD Peer Review시('13.1월) 중점협력국 개수 축소 권고
- 또한, 지난 5년간 운용 결과, 원조실적이 극히 부진한 국가에 대한 재검토 필요

##### □ 2기 국가협력전략(CPS) 수립

- 2기 중점협력국 재조정(26개국→24개국) 내용을 반영하고, 1기 CPS('11~'15)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2기 CPS 수립 필요

#### 〈 1기 CPS 문제점 및 개선 방향 ('13.8월, 16차 국개위) 〉

- (기능) 사업·재정 계획과의 연계 부족으로 해당국에 대한 맞춤형 중기 ODA 전략으로서의 기능 미흡
  - CPS는 수원국에 대한 우리의 원조방향과 목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작성하고, 시행기관에서 CPS에 부합하도록 '국별지원계획'을 매년 수립
- (내용) CPS 수립 시 시간적 제약으로 시행기관(EDCF·KOICA)이 수개국의 CPS를 기계적으로 작성하여 CPS의 질적 저하를 야기
  - 주관부처(국조실·기재부·외교부) 책임하에 작성하되, 産官學研 작업반을 구성하여 의견수렴 강화
- (활용) ODA 관련 기관에 미치는 구속력이 사실상 없으며, 관련 기관의 사업 참고자료로서 활용도도 부족한 실정
  - CPS에 근거한 사업 시행을 장려하고 핵심 사항인 Action Plan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되 작성 완료 후, 홈페이지에 공개



## 3-2 개선 방안

### □ 중점협력국 재조정

- 개도국의 소득수준 및 원조환경, 우리나라와의 경제·외교적 관계 등을 주요 지표로 하여 관계 부처 의견 반영
- 기존 26개 국가중 5개국(DR콩고, 나이지리아, 카메룬, 동티모르, 솔로몬군도)을 제외하고, 3개국(탄자니아, 미얀마, 세네갈) 추가
-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된 국가에서 진행 중인 개발사업은 차질 없이 완료하되, 정책자문 위주로 원조방향을 전환하고 국제기구와의 삼각협력을 통한 간접적 지원에 초점

지 역	제1기 중점협력국 : 총 26개		중점협력국 조정결과 : 총 24개	
	개수	명단 (음영은 제외국)	개수	명단 (밑줄은 추가국)
아시아	11	베트남,인도네시아,캄보디아,필리핀, 방글라데시,몽골,라오스,네팔, 스리랑카,파키스탄,동티모르	11	베트남,인도네시아,캄보디아,필리핀, 방글라데시,몽골,라오스,네팔, 스리랑카,파키스탄,미얀마
아프리카	8	가나,에티오피아,모잠비크,르완다, 우간다,콩고,나이지리아,카메룬	7	가나,에티오피아,모잠비크,르완다, 우간다,탄자니아,세네갈
중동·CIS	2	우즈베키스탄,아제르바이잔	2	우즈베키스탄,아제르바이잔
중남미	4	콜롬비아,페루,볼리비아,파라과이	4	콜롬비아,페루,볼리비아,파라과이
오세아니아	1	솔로몬군도	-	-

- 재조정 이후에도 수원 실적, 효과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

\* 중간평가를 통해 운용성과가 극히 미흡한 국가는 재조정 검토

### □ 2기 국가협력전략(CPS) 수립

- 국조실 주관으로 産官學研 작업반(Working Group)을 구성·운영 하여 지역전문성을 보완하고 대내적 설득력 제고
- 공관 및 수원국 의견수렴, 우리나라의 산업별 경쟁력 분석 등 정량·정성적 분석을 병행하여 국가별 중점협력분야 선정

## 4.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

### 4-1 현황 및 문제점

- (다자협력 규모) DAC 가입('10년) 이후 전체 ODA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, 다자협력 비율은 일정 수준 유지
  - \* 다자 비중 : ('11) 31.4% → ('12) 34.0% → ('13) 34.8% → ('14) 33.6%(잠정)
- (다자원조 전략) 양자협력과 같이 중점협력 대상을 선정하지는 않고 있으며, 다자기구와의 협력 비중은 기구 내 우리 역할(이사국 진출, 의장국 선임) 및 출자·출연 확대 기조 등에 따라 유동적
- (추진체계) 다자기구의 성격 및 원조 목적에 따라 주관기관을 달리 하는 이원체제로 운영(국제금융기구는 기재부, UN 및 기타 국제기구는 외교부)되고 있어, 부처간 사전협의 및 조율이 누락될 가능성 존재
  - \* 현재 다자협력 추진체계상 UN기구인 IFAD와 수출입은행(EDCF), 국제금융기구인 세계은행과 KOICA는 상호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
- (주관기관) 현재 23개 관련 부처(기관)에서 86개의 다자기구를 대상으로 다자협력을 추진 중('15년 예산 기준)
  - 다수의 부처와 기관이 서로 비슷한 다자기구에 소액의 중첩 지원을 지속하고 있어, 다자협력의 비효율성 문제 발생 가능
- (성과관리) 양자협력과 마찬가지로, 현재 추진 중인 다자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나 종합적인 성과관리 방안 미흡

## 4-2 개선 방안

- (다자원조 전략) 주요 MDB와 UN기구 대상, 중점협력 기구를 선정하고 동 기구들에 예산배분 집중
    - 양자협력 사업이 시행되기 어려운 지역·분야 및 다자기구의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다자협력 역량을 집중하여 효과성 제고
    - 다자기구 진출(이사회 진출, 국제기구 고용 확대 등)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
  - (분담금 납부체계 개선) 외교부가 관계기관과 협의, UN기구 분담금에 대한 납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자협력의 효율성 도모
  - (다자협의체 운영) 기존의 다자협력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'다자협력협의체' 운영, 주요 논의 사항(신탁기금 설치 등)에 대해 필요시 사전협의 및 사후보고 강화
    - 또한, 다자개발협력분과위원회(외교부)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무상 부처간 협의를 강화하고 사업실적 모니터링도 강화
  - (성과관리 강화) 다자기구평가네트워크(MOPAN)\* 참여를 강화하고, 중장기적으로 자체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여 ODA 예산 활용에 있어서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 추진
    - 다자협력에 대한 성과관리는 정규예산(다자원조/core) 지원에 대한 평가와 지정기여(다자성양자/multi-bi)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지원 방식에 따라 차별화
- \* 다자원조는 MOPAN과 DAC 회원국의 다자평가 보고서 등을 참고하고, 다자성 양자는 양자사업과 같이 사업활동 및 성과관리 계획을 구체화하여 모니터링 강화

## 5. 집행기관(EDCF·KOICA) 역량 강화

### 5-1 현황 및 문제점

#### □ 사업예산 대비 인력 부족

- 유·무상 원조기관인 EDCF·KOICA의 예산은 크게 증대되었으나 인력·조직 역량은 정체 상태

- \* (EDCF) '91년부터 '14년까지 집행액은 128배 증가하였으나 인원은 5.6배 증가  
집행액 연평균 23.5% 증가, 인원 연평균 7.8% 증가

- \* (KOICA) '91년부터 '14년까지 예산액은 35배 증가하였으나 인원은 1.5배 증가  
집행액 연평균 16.7% 증가, 인원 연평균 1.9% 증가

#### □ 해외사무소 역할 미흡

- 수원국과 정책협약, 현지여건 반영 등 수원국 중심의 ODA 추진을 위한 해외사무소의 기능 취약
- EDCF·KOICA 등은 기능강화가 필요한 해외사무소보다 본부를 중심으로 의사결정 및 인력배치
  - '14년 기준 EDCF 해외사무소 당 인력 수는 평균 1.6명(해외사무소 13개)이며, 전체직원중 해외사무소 근무자 비율 16%
  - '14년 기준 KOICA 해외사무소 당 인력 수는 평균 1.9명(해외사무소 48개)이며, 전체직원중 해외사무소 근무자 비율 28%

## 5-2 개선 과제

### □ 유·무상 원조 집행기관의 조직 정비

#### ○ 인력운용 로드맵 수립을 통해 각 기관별 적정규모인원 확보

< 원조업무 담당 직원 1인당 원조금액 (2013년 기준) >

국가	A :원조액 (백만 달러)	B: 원조업무 담당 직원 수(명)	A/B (백만 달러)
우리나라	1,056.1	424	2.49
이탈리아	867.4	541	1.60
노르웨이	4,315.8	2,400	1.80
캐나다('11년)	4,234.7	1,911	2.21

### □ 해외사무소 역량 보강

#### ○ 수원국 중심의 사업발굴과 사업 밀착관리를 위해 해외사무소를 증설하고 해외근무 인력 확충 추진

\* '14년 기준, 현지사무소 인력 비율은 EDCF 17%, KOICA 28%로 타 공여국에 비해 낮은 실정(독일 80%, 덴마크 73%, 프랑스 54%, 영국 39% 등)

\* 현지사무소 당 인력(명): (AFD) 10, (JICA) 20, (EDCF) 1.6, (KOICA) 1.9  
 현장사무소 운영현황('14년, 개소) : (JICA) 92, (EDCF) 13, (KOICA) 48

#### ○ 현지에서 유·무상간 교류 및 연계 강화를 위해 EDCF-KOICA 해외사무소 공동근무(one roof)\* 단계적 확대

\* 캄보디아('14.2월), 스리랑카('14.6월), 콜롬비아('14.6월, 인접건물) 완료

## 1. ODA 콘텐츠 재정비

### 1-1 현황 및 문제점

- 우리나라의 발전경험과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모델 정립 노력 지속
  - 'ODA 선진화 방안' 수립시('10년) 개발경험·사업기술·감성 분야 3개 분야에 대해 개발협력 콘텐츠를 마련키로 결정
    - \* 총괄기관 : 개발경험(기재부), 사업기술(외교부), 감성분야(외교부·문화부)
  - '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'('12년)을 통해 ODA 프로그램 pool\*을 구성하고 우선 추진이 가능한 기본 프로그램(40개) 도출
    - \* 4개 분야(경제, 사회, 행정제도·거버넌스, 미래·범분야 이슈) 159개 프로그램
- 한국 개발경험을 기반으로 한 ODA 분야에 대한 수원국 요청 지속 증가
  - \* '11년 이후 아시아·아프리카 등에서 농촌개발의 국제적 성공 모델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요구 지속 증가
- 1차 ODA 기본계획 기간 중 마련·적용중인 개발협력 콘텐츠·모델에 대해 점점·재정비 필요
  - 기존 모델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수가 많고, 전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'선택과 집중'의 기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
  - 지역별·수원국별로 특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ODA 프로그램 모델 선정·운영으로 현지화에 한계

## □ 기존 개발협력 모델 전반적 평가 및 재정비

- 각 개발협력 모델에 대한 수원국 선호도, 현지화 성공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여 시사점 도출
  - \* ‘한국형 ODA 추진방안’(12년)을 기반으로 점검·재정비를 추진하되, 선진화 방안의 시범 원조모델인 △농촌종합개발, △직업훈련 프로그램, △모자보건 사업 3개 분야는 심층 점검 실시
- 국제여건 변화, 개발효과성 원칙, 현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고려한 기존 모델 재정비 추진
  - \* 필요시 특정지역에 적용가능한 ODA 모델 별도 선정
- 사업 추진시 초기비용 절감 및 학습시간 단축을 위해 성공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

## □ 개발협력 모델의 실효성 강화

- 유상 및 무상원조 시행계획 수립시 개발협력 모델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수립·반영
- 신규 사업 발굴시 개발협력 모델 우선 고려
- 중점협력국 대상 중점협력분야 선정시 개발협력 모델 프로그램 우선 반영

## 2. 사업 절차 개선

### 2-1 현황 및 문제점

- (발굴) 수원국 수원총괄기관의 공식 요청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협의 창구를 수원총괄기관으로 일원화하도록 되어 있으나,
  - 일부 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공식 요청 없이\* 사업을 기획하거나, 수원국 개별부처와 협의하여 수원국 개발 사업에서 수원총괄기관 배제
    - \* 사업심사시 수원국 요청서 미비 사업 : ('15) 23개
  - 다수의 시행기관이 개별적으로 수원국 정부와 협의를 실시함에 따라 수원국 내 비효율·혼란 발생
  - CPS·국제개발협력 국제적 의제(MDGs 등) 관련 주요 방향·목표 등이 사업형성 단계에 고려되는 기제 미흡
- (편성) 시행기관은 매년 차년도 ODA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개위의 사전 심사·조정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청하여야 하나
  -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이 있는 등 예산편성과 사업 조정간 연계 일부 미흡
    - \* 국개위 심사 없이 예산 편성된 ODA 사업 : ('13) 20개 → ('14) 16개 → ('15) 6개
  - 교류·홍보 등 시행기관 자체의 목적을 위한 ODA 사업 다수 추진
- (평가) 각 시행기관은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중이나,
  - 자체평가 결과의 환류 및 공유 미흡으로 사업 개선·선정 과정에 미치는 효과 미미



## □ 현장 중심의 사업 발굴 강화

- 수원국 요청서 미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 선정에서 배제하고, 先 수원국 요청-後 타당성 조사 원칙 적용
- 각 기관의 개별 접촉으로 인한 수원국내 혼선 방지를 위해 '수원 총괄기관-재외공관-시행기관'의 협의 채널 준수
  - \* 「ODA 협의채널 가이드라인(제16차 국개위 의결)」
- 현장경험·전문성이 풍부한 국제기구·타 공여국과 공동으로 사업 발굴
  - \* 기후변화, 식량안보, 경제·사회인프라 등 우선 협력 분야 선정
- CPS·2030 지속가능개발의제(SDGs)와 개별사업간 연계 강화
  - \* 사업계획서상 CPS 및 지속가능개발의제 관련성 적시, 심사시 참고

## □ 발굴-편성-평가 순 과정에 걸쳐 사업 절차 체계화

- ODA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예비사업-진행사업-완료사업 정보 조회를 통해 시행기관의 사업 발굴시 기존 사례 검토 지원
- 「연간 종합시행계획」 조정 결과와 예산편성간 연계 강화
  - \* 각 부처는 ODA 사업 예산 편성시 국개위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요구
- 각 기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'기관별 ODA 시행계획'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 편성
- 단년도 계속사업\*에 일몰제 적용, 3-5년 주기로 자체평가 및 환류 결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계속 추진여부 결정
  - \* 일회성 행사·초청연수·장학지원·개발컨설팅 등 매년 수원국을 변경하여 실시되는 사업

### 3. 사후관리 강화

#### 3-1 현황 및 문제점

- 원조효과의 지속성을 위해 사업완료 이후 사후관리가 중요하나,
  - 사후관리에 대한 정의·절차 등이 기관별로 상이\*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및 사업비 반영 부족
    - \* (EDCF) 사업의 완료 후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을 보완하거나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·유지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·지원
    - \* (KOICA)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종료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적·비정기적 점검 및 추가지원

#### 3-2 개선 방안

- 사업 시행기관별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사후관리 지침 마련\* 등 종합적인 사후관리체계 구축
  - \* 일본의 경우 '03년 후속협력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체계화
- 대상선정기준·시행절차·종료시점 등을 포함한 기관별 사후관리규정 마련
- 사후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ODA 시행기관간 (유·무상간, 무상기관간) 연계를 활용한 사후관리 실시
-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종료 5년후 운영 현황 조사 실시
  - 사업의 사후관리 실태를 평가,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유사 사업 추진시 활용
    - \* 필요시 수원국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·시행

## 4. ODA 평가와 환류 강화

### 4-1 현황 및 문제점

-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평가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평가 활성화 토대 마련
  - (소위평가) 국개위 평가소위는 다수기관 관련 사업, 중복성 해소·효율성 제고 등이 시급한 과제 등을 선정하여 평가 실시
  - (자체평가) 각 시행기관별로 소관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, 평가소위원회에서 평가결과 심의
    - \* 자체평가 실시기관 및 과제수 : ('10년) 6개 기관 18건 → ('14년) 25개 기관 80건

- 평가의 전문성·객관성 확보 및 성과관리 고도화 한계
  - ODA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('10년 1.3조원→'15년 2.4조원)되고 있으나, 평가 예산·인력의 증가는 예산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

<EDCF·KOICA 평가 보고서 수·예산·인력 변화>

(단위: 건, 백만원)

	EDCF				KOICA			
	2011	2012	2013	2014	2011	2012	2013	2014
평가 건수	8	9	10	10	18	18	24	31
평가 예산	278	280	461	463	631	694	926	908
평가 건당 비용	34	31	46	46	35	38	38	29
담당인력	4	5	6	7	7	7	7	7

- 다수의 사업시행기관이 독립된 평가부서 없이 사업담당자가 평가 수행
-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기획(발굴·형성·승인)단계에서 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설정 미흡
  - \* ODA 사업 결과물(홍보물 제작, 건물 준공 등)을 성과지표로 제시·평가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(인식제고, 취업률 상승)에 대한 평가 도출에 한계
- 평가 결과의 환류 및 공유 미흡으로 사업 개선에 미치는 효과 미미

## 4-2 개선 방안

- 평가 예산 및 인력 확대를 통한 평가 품질 개선
  - 각 시행기관은 평가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평가의 양·질적 수준 제고
  - 평가 담당 직원의 교육 참여 권장 및 ODA 사업전담기관의 평가 담당 직위의 전문직위제 실시
    - \*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,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 기간 확보
- 대규모 사업에 대한 외부평가 실시로 재정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
  - 다수의 ODA 사업(10건 이상)을 추진하는 시행기관은 사업비 상위 5개 사업 중 3개 이상 사업에 대해 반드시 외부평가 실시 및 관련 예산 증액 추진
- 독립적인 평가 부서 설치 및 평가의 객관성 담보
  - (평가소위) 국조실 내 평가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각 부처 평가업무 관리·감독 및 평가 기능 지원
  - (시행기관) 외부기관을 활용하는 자체평가 건수 점진적 확대
- 사업 심사시 당해 사업의 기존 실적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환류 강화

## 5. 사업투명성 제고

### 5-1 현황 및 문제점

- 개발협력에 대한 투명성 강화 요구 증가
  - 대의원조정책 해결과제 중 '원조정책의 투명성 부족'이 최우선 과제로 인식
    - \*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, 경희대 산학협력단('14.12월)
- 제3차 OECD DAC 고위급회담(가나, '08년)에서 국제사회는 원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
- 우리나라는 국제원조투명성기구(IATI)\* 가입 방침 확정('14.3월) 및 국제사회 공표('15.9월)
  - \* (IATI) 15개 공여국과 220개 이상 국제기구 및 기관 가입
  -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필수공개 항목(13개) 우선 공개
    - (필수공개 항목) 기관식별자, 기관명, 보고기관명, 사업식별자, 사업명, 사업설명, 참여기관, 사업현황, 사업날짜, 수원지역, 분야 등

### 5-2 개선 방안

- 공개대상·항목 확대 등 투명성 제고 노력 지속
  - 필수 공개 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한 추가 공개 검토
  - 개발협력을 수행하는 시민단체·학계 등도 IATI를 통한 정보공개 동참토록 하여 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
- IATI 정보공개 항목은 'ODA KOREA 홈페이지'를 통해 일반 국민이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 확대

## 6. 인도적 지원 확대

### 6-1 현황 및 문제점

- 분쟁·자연재해·신종 감염병 등으로 인도적 지원 수요 지속 증가
  - \* '13년말 기준 전세계 약 100여개의 무력 분쟁 발생(역대 최고 수준),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·해일 등 지속 증가 추세
- 인도적 지원 규모 확대 및 시스템 강화 필요
  - 우리나라 ODA 대비 인도적 지원 규모('15년 1.67%)는 낮은 수준
    - \* 주요국 ODA 대비 인도적 지원 총액 ('13년) :  
미국 15%, 영국 10%, 일본 9%, 스웨덴 14%, 스페인 13%(DAC 평균 6%)
  - 전략적 접근, 전문인력 양성, 민간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시스템 강화 필요

### 6-2 개선 방안

- 중장기적으로 인도적 지원 규모 지속 확대
- 인도적 지원 예산의 효과성·가시성 차원에서 비교우위 분야\*를 선정·지원
  - \* 아동·여성·난민 등 취약계층 지원, 교육역량 강화, 구호-재난-개발 연계, 재난 위험 경감 등
- 인도적 지원 관련 총괄·조정 기능 강화 및 관련 인력·조직 확충을 통한 역량 강화
  - \* 인도적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구축을 위한 협의회 운영 등 공조 체제 강화
- 정부-민간간 협력채널 구축\*, 민간의 해외긴급구호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관 협력 강화
  - \* 민관협력 운영위원회 활용, 민관협력 수시 간담회 및 연례 포럼 개최

## 1. 범국민 이해와 참여 증진

### 1-1 현황 및 문제점

- 일반 국민의 지지는 높으나 확대를 지지하는 비율은 감소 추세
  -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ODA 제공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86.5%(적극 찬성은 9.7%)
    - \*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, 경희대 산학협력단('14.12월)
  - 다만, ODA 규모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확대에 소극적\*이며,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\*\*
    - \* '14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현재의 ODA 규모에 대한 의견은 적정 54.3%, 축소 32.7%, 확대 13.0%로 나타남
    - \*\* 축소지지 비율 : ('11) 26.7% ('12) 27.4% ('13) 22.4% ('14) 32.7%
- 범국민 이해 증진에 대한 보완 필요
  - 일부 ODA 관심층을 중심으로 홍보대상이 한정되어 일반국민이 ODA 정보를 습득할 기회 부족
  - 홍보·교육이 계층별·세대별로 차별화되지 않아 홍보·교육의 효과성·효율성 저하
  - 홍보·교육 콘텐츠에 대한 부처·기관간 협의가 부족하여 전달되는 정보 및 내용의 일관성 저하

## □ 세계시민교육 강화

- 사회·전문교과 등 관련 교과목의 교과과정 반영, 교사 역량 강화, 유네스코 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실시 등 추진
  - \* 「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(APCEIU)」을 통해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을 지원하고 세계시민교육 중심기관으로서 육성('15년 5월 「세계교육포럼」)

## □ 일반 국민과의 접점 확대

- 지하철·버스 등 일상생활 접점과 주요 온라인 포털 등을 활용하여 ODA 사업을 소개하여 일반국민의 체감도 제고
- TV방송·신문 기획기사·학술회의 등을 활용하여 ODA의 필요성·성과를 국민에게 전달

## □ 연령별 참여 기회 확대

- (초중고생) 공교육 및 체험행사 등을 통해 ODA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고 세계 시민 의식 고취
- (대학생) ODA 분야 진로희망 및 관심층을 대상으로 교육 체험기회를 확대하여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
  - \* WFK(World Friends Korea), EDCF 청년 인턴 등 청년층이 ODA 직접 참여기회 확대 추진
- (청·장년) 주요 납세자임을 고려, ODA 성과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, 장년층의 경우 퇴직후 개도국 대상 개발 사업 참여 가능성 확대
  - \* KOICA에서 기 운영중인 World Friends KOICA 자문단·World Friends NIPA 자문단 규모 확대
  - \* EDCF 사업 종료후 사후관리 사업 진행시 퇴직자 적극 활용 검토



## 2. 민간 파트너십 다원화 및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확산

### 2-1 현황 및 문제점

- 정부 주도의 개발협력에서 시민단체·학계·기업이 참여하는 개발협력으로 개발협력의 파트너십 확대
  - 민관협력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 시도
    - \* KOICA는 기존 시민단체 협력 프로그램 외에 기업('10~), 대학('12~) 등과 민관협력사업 지속 확대
- 제3차 개발재원총회(아디스아바바, '15년)는 민간분야가 개발의 주요 동인임을 인정하면서 글로벌 기업활동의 연계 필요성 제시

### 2-2 개선 방안

- 민간 파트너십 다양화
  - 기존 시민단체·학계·기업 대상 민관협력 프로그램의 규모 확대
  - 각 참여주체-정부간의 1:1 협력에서 나아가 다양한 주체가 사업을 공동 기획·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
    - \* 학계(연구·컨설팅) - 기획(KOICA·시민단체 등) - 집행(업계) 등 다양한 주체 참여 가능
-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지원
  - 전경련·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와의 대화를 개최, CSR·CSV 사업과 ODA 사업과의 시너지 모색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모색
- ODA 생태계 조성
  - ODA 전문가 자격 검정제도 세분화,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관련 종사자의 ODA 전문성 제고
  - 대학원 개발 분야 전공 세분화 및 ODA 연구활동 촉진 등 인력 양성 기반 마련

### 3. 삼각협력 활성화

#### 3-1 현황 및 문제점

- 우리나라는 그동안 우리나라-개도국, 우리나라-국제기구 등 양방향의 개발협력을 위주로 추진하여 삼각협력 추진실적은 미미한 수준

#### ※ 삼각협력

- 공여주체(전통적인 공여국, 국제기구), 주축국(중소득국, 개도국), 수원국(개도국) 세 참여주체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 개발 모색
  - 주축국은 전통적인 공여국의 경험·재정적인 지원 및 역내 수원국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개발 지원
    - \* 과거 일본은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주축국 역할 담당
    - \* 우리나라는 공여주체와 주축국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비교우위를 갖춘 국가

#### 3-2 개선 방안

- 우리와 지리적·문화적 거리감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거점 국가를 활용한 삼각협력으로 추진 검토
  - 우리나라와의 중점협력 관계, 국제사회에서 신흥경제로서의 인지도, 지역 내 역학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축국 선정
    - \* 예) 아시아 : 베트남, 필리핀 / 중남미 : 브라질, 콜롬비아, 페루, 칠레 등
- 수원국의 발전을 보다 효과성 높게 견인하기 위해 주축국 원조 행정체제에 대한 정비 및 역량 강화도 동시 추진

## 4. 다양한 민간재원 활용 확대

### 4-1 현황 및 문제점

- 전통적인 원조에서 광범위한 개발협력으로 협력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 재정 이외의 민간재원 활용에 대한 필요성 대두
  - (재원조달) 정부 재정 뿐만 아니라 시장차입 재원을 함께 활용하여 재원기반 확충
  - (지원방식) 전통적인 양허성 차관과 準상업차관·보증지원·지분 투자 등의 다양한 방식 포함
- 개도국은 국제금융시장 접근이 어려워 ODA가 주요한 개발자금 공급원이지만, 재원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
  - \* 개도국의 인프라개발 수요(1조달러)에 대한 재원조달 현황('12년, WB): (양자ODA) 630억불, (MDB) 510억불, (부족분) 8,860억불
  - 개발금융은 민간 자본의 유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도모할 중요한 개발재원으로 주목
    - \* '15년 SDGs 에서도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수단으로 ODA를 넘어선 '개발재원(financing for development)' 접근이 강조
  - 개발금융은 ODA와 민간 상업금융의 중간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 수행 가능
    - \* 시장재원과 정부재정을 적절히 조합하여 높은 위험에 따라 상업금융 지원이 어려운 개도국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

## □ 개발금융 등을 통해 개발협력 규모 확대

- 재정의 한계 및 수원국의 개발수요 확대 등을 감안하여 시장재원 활용\*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검토·제도화

\* (예) 수은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수원국에 다양한 형태의 양허성 차관으로 제공하고, 이차(시장재원 조달금리와 개도국 차관금리 사이의 차이)를 정부가 보전

\* (독일·프랑스) 양허성 차관의 상당 부분을 시장에서 조달, 다양한 형태의 금융수단을 통해 차관으로 제공

※ 민간의 재원을 새로운 ODA 재원으로 조성, 유상원조의 비율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국개위에서 추후 논의

## □ 국제금융 분야 경쟁력 강화

- 개발금융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관련 인력에 대해 리스크 관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전문성 제고

\* 독일(KfW)이나 프랑스(AFD)의 경우 해당기관이 단순한 ODA 집행기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전문금융기관

## □ 다양한 민간금융수단 도입

- 고양허성차관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탈피, 공공·민간부문 개발지원을 위한 다양한 민간금융수단 도입 추진

\* 이차보전·보증 등 정부지원으로 투자위험을 줄여주어 민간의 개발협력 참여 유도

- 수원국 소득수준·사업성격 등을 감안, 차관 및 민간금융수단을 포트폴리오로 구성·지원

## 5.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

### 5-1 현황 및 문제점

- 국제개발협력을 선도하는 주요 공여국들은 공동의 정책과 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호 협력
  - \* 인프라 펀드(Infra Fund) 및 챌린지 펀드(Challenge Fund) 등 특정한 목적의 기금 설립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여 개발효과성 제고
- 대학·기업·재단 등 민간 참여자들과 유기적으로 협력 채널을 만들어 지원 방식을 다원화하고 참여 그룹 확대 중
- 주요 선진공여국·민간재단 등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관련 경험 공유 등 ODA사업 선진화 필요
  - \* MOPAN 및 ECOSOC 의장직 신규 수임으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 증가

### 5-2 개선 방안

- 주요 공여국 원조기관들과 상시협의채널을 확대하고, 주요 국부펀드와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 공동진출 추진
  - 프랑스(AFD)·독일(KfW) 등과 신규 협의채널을 구축하고, 베트남 6bank 협의체\*와 같은 수원국내 공여국 협의체 참여 확대
    - \* 베트남 전체 ODA 지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EDCF, WB, ADB, AFD(프랑스), JICA(일본), KfW(독일)로 구성된 현지 협의체
- 국내 및 해외 유력 재단과 협력 강화를 통해 이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또는 우리 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협력 강화
- ECOSOC 의장 활동을 통해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후속조치 및 평가 노력 견인

---

## VI. 향후 계획

---

□ 시행계획 수립·추진

- 각 부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
- 유상(기재부), 무상(외교부) 분야별 시행계획(1년단위) 수립

□ 「제2차 기본계획」 본격 추진

- '16년부터 제2차 ODA 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추진과정에서 조정 필요사항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율

□ 「제2차 기본계획」 평가 및 점검

- '17년 OECD DAC 동료검토(Peer Review) 결과를 참조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
- 국내외 환경 변화 및 주요 정책 환경 변화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관련사항 점검·조정 실시